이명박 정부시절 전방위적 불법 사찰

법조계·언론계·교육계등 각 분야··· 민정수석실 거쳐 MB에 보고돼··· 검찰, 문서 3395건 확보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를 전방위적으로 불법으로 사찰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 러났다.

해당 문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보고한 문서 중 일부는 특정 언론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과거 박근혜 정부 처럼 리스틀 장석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

이 문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영

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33%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해당 문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난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 받은 '현안 자료'로 파악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주요국정 정보'와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도 포한되 것으로 보이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3대 보수 교원노 조 통합으로 인한 전교조 적극 견제' 및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 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제목의 문건이, 종교계와 관련 해서는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 비난 활동 적극 차단,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인 대응방안 강구' 등 내용 이 담긴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 간부의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이나 '보수언론 활성화로 우호적 여론환경 조성',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 성'등 불법적인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들 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좌파의 시법 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시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 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시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라는 제목의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능인선원의 주지인 지광 스님 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의 청탁 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광 스님을 만나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광 스님도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기자

南예술단 160명 평양서 2회 공연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북한 평양에서 한국 대중가요 공연이 펼쳐진다. 남측 예 술인의 방북 공연은 지난 2007년 11월 황 해도 정방산에서 있었던 풍물공연 이후 11 년만이다.

남북은 20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 측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실무접촉을 진 행해 공연 일시, 장소, 출연진 등을 확정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번 공연에 160여명 규모의 남 측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예술단 에는 조용필·이선희·최진희·윤도현· 백지영·레드벨벳·정인·서현·알리 등 의 대중가요 가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남측 예술단은 오는 31일 평양을 방문해 내달 3일까지 나흘간 머물며 동평양대극 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총 2회 공연 하다

남측은 예술단 파견에 앞서 오는 22~24일 사전점검단을 파견해 무대·음향설비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북측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이번 남측 예술단 공연과 관련해 방북하는 모든 인사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외에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사 안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 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측 예술단 의 방북 경로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전 망이다. /뉴시스

>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평양 공연을 위한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송월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일정 의결

21일 공고 · 24일~30일 온라인 접수··· 4월 2일~4일 서류심사 · 15일 심사 완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희승)가 20일 오 전 9시 30분 도당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 내 서류심사 소위원 회(위원장 송기도)와 여론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유충종)를 구성하고 공직선거후 보자 공모 일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 자 공모는 오는 21일 공고를 내고 24일 오 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https://win.theminjoo.kr)으로 접수 받는다. 심사비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300만원, 광 역의원 25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 등이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2차 회의는 31일 오후 2시 도당 회의실에서 열리며 4 월 2일~4일 서류심사와 6일~8일 후보자 면접과 단수후보자 발표,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갈등사업' 초반 분수령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자리를 두고 현 김승수 시 장과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출신인 이현웅 예비후 보 간의 더불어민주당 내부 격돌이 시작된 가운데 이 른바 '갈등사업'에 대한 쟁점화가 초반 경선 싸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이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전주역 마중길 등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치열한 공빙이 오갈 전망이다.

20일 이현웅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후 보 등록 후 첫 공약 발표 시간을 가졌다.

청장년 일자리와 교통 문제 해결 등 모두 8가지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민간 자본을 유치한 기존 안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문화공간 만들기 등 획기적 개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존 김승수 시장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민들기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전주종합경기장이 지난 4년간 방치돼 흉물로 전략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 예비후 보는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어떤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도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역 첫 미중길의 경우도 "미중길이 한숨길이 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아미추어 행정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수 시장은 전북도로부터 소유권이 이앙된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숲과 공원, 광장 등으로 조성 된 문화공간으로 탈버꿈 해 시민의 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의 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 갈등 사업에 대한 이 같은 이현웅 예비후 보의 초반 강공과 현 김승수 시장의 반격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이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전주을 "도의회 선거구 꼼수획정 중단해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기운데 전북시군 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획정안에 따라 의원정수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연일 '꼼수 획정안'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이번에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도의 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도의회는 기초의원선거구 꼼수획 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주을에서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것은 전날 도의회 행정자 치위원회가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 주병이 11명을 배정했지만, 도의회 행자위가 전주갑 9명, 전 주을 9명, 전주병 12명으로 수정가결했다.

즉 전주을에서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비례가 아닌 국회 의원 지역구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배분했다"며 "이같은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 의석수 배분을 밀실에서 바꿔치기한 의회 폭거에 해당한다"며 "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번 꼼수획정을 바로 잡이주기를 간곡 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 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뉴시스

